

# 문재인 정부와 한일관계의 향방

2016년 가을, 한국 사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차가운 겨울을 보냈다. 2017년 봄, 광화문의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성취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적폐청산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문재인 정부는 인사부터 모든 행정 기구 개편까지 대변혁을 외치고 있지만, 산적해 있는 국내 외 현안들은 외침만으로 풀리는 것들이 아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감 속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미중과 갈등하는 상황은 날이 갈수록 미묘한 외교적 상황을 낳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일본공간에서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이 현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일 시** 2017년 5월 26일  
**장 소**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사회자** 김기석(강원대학교)  
**참석자** 이원덕(국민대학교)  
박 훈(서울대학교)  
김웅희(인하대학교)  
이면우(세종연구소)

...

## // 김기석

오늘은 한국의 신정부 탄생 이후 신정부가 과연 어떤 대일정책을 취할 것이며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이 될지,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한일관계는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일본 공간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전공 영역을 살려서 좌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모두 다 사정이 되지 않아서 편집위원이 아닌 분도 초빙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 문제 그 다음 정치안보 관계, 다음 경제 관계, 그 다음에 다자협력 이슈, 이렇게 네,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신정부가 대일관계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면 좋겠다, 어떤 전략으로 대일관계에 임했으면 좋겠다하는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난맥상을 보였다고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대일관계 혹은 전반적인 외교 정책/관계의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유산으로 주어졌는데, 이것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영역별로 짚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전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썼던 부분이 첫 번째는,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정서를 일본 측에서는 반일정서로 이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 그것이 최근에 문희상 의원을 대표로 한 특사 외교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문희상 대표의 특사 외교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부분 같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시죠.

## 외교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면...

### // 이원덕

일본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출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당혹감과 더불어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파기론 또는 재협상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경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한국에서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일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하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식이 일본에 확산됐는가 하면, 저의 관찰로는, 우선 한국 보수 언론이 펼친 진보세력에 대한 이념적 비판 내지 경계론의 시각이 여과 없이 일본 미디어에 투영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대미관계, 한일관계가 뼈격거릴 것이다, 대 미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단순 도식으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 주



이원덕\_국민대학교

# 韓日關係 向方

재하는 일본 외교관이나 일본 특파원들과 접촉해 보면, 이 사람들도 하나 같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두 가지로 반론을 하곤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일관계를 보면 오히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전반기까지 양국 관계가 우호협력의 기조였고, 오히려 보수정부에서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명박 정부의 독도방문과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집착으로 한일관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부일 때 오히려 한일관계는 순조로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선국면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안감 내지 경계감은 한두 가지의 영상 내지 스틸 사진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선거유세를 할 때, 부산 소녀상 앞에서 포즈를 취한 영상이 반복해서 일본의 뉴스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흘러나갔습니다. 이것이 반일 이미지로 비춰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소녀상 이전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반일적인 생각을 가진 지도자라는 단순한 인식이 확산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와는 동떨어진 이미지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반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베 총리와의 전화 회담과 대일 특사 외교가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인식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상 간 전화 회담과 특사 외교는 잘 되었는데 적어도 두 가지 메시지가 일본에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불만 내지 비판이 있다는

점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했고, 그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와 기타 사안을 분리해서 별도로 다루겠다는 분리 외교의 방침도 동시에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투 트랙 외교, 즉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경제, 안보, 문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해 나갈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가 이번 특사 외교의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진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확보했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내지 한일관계를 일방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단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고, 열린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 박훈

지금 이원덕 선생님이 한국의 보수 여론, 언론이 그대로 일본에 투영되었다, 여과 없이 투영되었다고 그러셨는데, 한국의 보수 언론이 뭐 진보 언론보다는 일본의 영향이 센 건 맞겠죠? 그런데 저는 그 영향도 있지만, 저 자신도 문재인 씨가 위안부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난히 자주 언급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그런 발언을 자주했다는 인상이 있거든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어떻게 모르겠지만...

#### // 이원덕

다른 후보에 비해서요?

#### // 박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보수 언론 탓도 있겠지만, 문재인 씨 스스로도 비밀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상

황이 달라지겠지만, 특히 대선 후보 토론에서 그런 표현이나 언어 이런 걸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 김기석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한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무 위안부 문제를 강조해서 마치 한일관계에 그것만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자기 공간을 너무 제약한 측면이 생겨 버렸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표를 얻기 위해 반일적 태도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후 조금 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면 이 문제를 한일관계의 다른 이슈들과 연계지어 좀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치게 위안부 문제 중심으로 한일관계를 계속 끌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일단 이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갖는 한일관계에 대한 함의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전략 혹은 동맹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저는 흥미로운 테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면우 교수께서 워낙 해박하시니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면우

제가 우리 일본학회 프로젝트에 참여해 쓴 논문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집권기는 오바마 때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오바마처럼 한국에 대



이면우\_세종연구소

해 이해가 깊은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바마는 중재자적 역할이라고 할까, 한일 간에 잘 협력하란 식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트럼프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얘깁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캐릭터 상 그렇고, 둘째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내지 아시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 또는 우선이어도 좋고, 미국 중심의 일방외교라고 할까, 미국과의 양자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달리 얘기하면 전통적인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가깝다고 봐요. 유럽과 비교해서 흔히 지적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주의 외교를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TPP 탈퇴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저는 일본이 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독재자 혹은 독재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정권 또는 독재자를 일종의 리더십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이나 터키의 에르도안,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베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국에 대해서 유연한, 우호적 사고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초반에는 무역 등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 비판적 언동도 많았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일본이 생각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 모양새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생각하는 미일관계 또는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일 진영 대 중·러 진영의 대립구도를 전제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그런 틀을 벗어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일본 보수 쪽에서는 여태까지 오바마에 대해서, 아시아 특히 중국 정책에 대해 비판할 때, 중국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아마이하다(안일하다)'는 식의 비판을 많이 했는데, 실상 트럼프는 그런 '아마이'한 정도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독자적인 대응, 예를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PHP연구소(일본의 출판업계 중 하나이자 우수한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도 그랬고, 세계 평화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트럼프가 등장한 배경도 유의해야 하는 등, 어떻게 될지 모르는 측면이 있기에 신경을 써서 독자적 대응 능력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러한 우려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일관계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 // 이원덕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트럼프 정부 하의 한미일 협력체제 혹은 한일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대일 외교가 다소 불리해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정부 역시 한일관계를 한미일의 협력 틀에서 본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오바마에 비해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바마 정부는 아무래도 국제적 규범이나 가치 즉, 인권이라든지 정의라는지 이런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이 강했다고 봐요. 그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게도 조기 타결의 압력을 가하긴 했지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 아베 정부가 일탈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런 규범이나 인권이나 여성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 있을까 의문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의 협력구도라 하더라도 트럼프는 한국보다는 일본을 중심에 놓고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가 특히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가치나 규범을 강조할 때 먹힐 공간은 이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또 하나는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성인데, 아베는 벌써 발 빠르게 미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트럼프와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인간적 신뢰관계를 쌓았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 아시아 정책의 귀를 붙잡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사회에서는 아베의 방미 이후 대미 불안감 내지 트럼프 불신을 불식시키고, 나름 대미동맹 강화를 통해 트럼프하고 손잡고 동북아시아를 경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는 국정 공백이 6개월 이상이나 지속되었고 또 트럼프 등장 이후 한미관계는 아직 첫 단추도 끼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한일관계에도 다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 // 김기석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긴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한테 당장의 문제로 다가와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위안부 문제 또는 역사 문제인데, 향후 문제인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 그에 대한 일본의 반응, 그것이 낳을 결과 등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문희상 특사 말씀을 드렸는데, 특사가 돌아와서 명확히 위안부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정에 대해 파기나 재협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게 외교적으로는 현안에 대한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질지 사실 잘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들어가서 일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면 한일관계에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내적 요구 같은 것을 좀 원만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혜를 모아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박훈 교수님께서서...

## // 박훈

해결 방법은 잘 모르겠고요. 문희상 씨가 돌아와서 코멘트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위안부 합의를) 아직 감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것을 이해하는 듯한 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여지책에서 나온 말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왜 저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요. 그 다음에 강경화 후보자 지명도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국민들 인식이 그렇게 되었다고



박훈\_서울대학교

하고 있잖아요. 강경화 인터뷰를 보니까 나눔의 집인가요? 거기를 기회가 되면 한 번 가겠다, 한 번은 찾아뵙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걸 갖고 ‘꼭 할머니 집에 가겠다’는 식으로 제목을 단 대서특필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또 UN 인권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또 재협상을 권고했다는 보도도 나오구요. 그 권고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국제사회가 백업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이런 세 개의 팩터가 겹치면서 국민들께 과도한 기대감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 // 이면우

좀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언론은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 // 이원덕

정확히 말하면 UN 인권 위원회가 아니고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죠.

## // 이면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한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만 갖고 하더라도, 현재 살아 계신 분들 46명 중에 서른 두 분이 받고 두 분은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된다더군요. 그런데 남은 분은 열 두 분인데, 이 분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소수인데, 그게 정치적으로 좀 더 호응 받을 것 같아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한국 내에서는 수적으로 볼 때는 소수인데, 왜 그것을 좀 더 부각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보도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 이원덕

그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굉장히 큰 주제이고, 저는 한국 미디어의 보도 프레임과 관련이 깊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지적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대가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에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권 초기인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비슷한 데가 있었거든요.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어디까지 외교 아젠다로 삼을 것인지, 또 외교 아젠다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지 하는 게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는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 아젠다를 대일 외교의 넘버원으로 삼았고, 게다가 위안부 문제를 대일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거는 외교를 전개했잖아요. 문제인 정부도 지금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박 정권처럼, 그런 방식으로

외교 아젠다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이면우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봤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아직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 이원덕

그런 환경을, 여론 환경 내지 국민 여론을 어떤 방식으로 외교화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아젠다 설정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정권의 선택이거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 김기석

문희상 특사의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식 메시지거든요. 그것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선거 과정에 했던 것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일종의 냉정함,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의제로 던져 본 겁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좀 조율된 형태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첫 번째 메시지가 특사를 통해서 나왔고, 다음은 아마 외교 장관이라든가 새 외교 안보팀 등에 의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韓日關係 向方

// 박훈

문희상의 메시지를 이거는 파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기석

일단은 그러니까 외교적 차원에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뜻이죠.

// 박훈

이 문제가 합의가 안 된 건데 다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협정의 파기는 100% 안 된다, 이렇게 안하고, 뭔가 여지를 우리에게 줬다, 이런 식의 기대감을 주게 하는 멘트였다고 받아들였거든요.

// 이면우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 김기석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사실 100%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50%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준을 조금 더 합리화해가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외교적으로 더 이상 그런 걸 추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외교적 아젠다와 섞어서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다룰 여지 같은 것을 만들려는 생각이 있지 않았느냐 하고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 이원덕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전화통화도 그렇고 문희상 특사의 방문에

서 나온 메시지도 그렇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물론 그 해석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시다만, 하나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달했어요. 박훈 선생님은 거기에 주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 트랙 외교를 하겠다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역사 문제하고는 별개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정신을 이야기 했거든요. 세 번째는 셔틀 외교의 복원이예요. 이견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안 다룬다는 게 아니라, 다룬다 하더라도 정상회담까지 포기하면서 그거에만 싱글 이슈로 집중하는 외교는 안 하겠다 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박훈 선생님은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하신 거고,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좀 희망적으로 해석하면, 위안부 문제를 다루더라도 채널 자체를 단절하거나 정상회담을 중단하는 방식의 그런 어프로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 // 박훈

저는 한일 양국에 이견이 있다는 데 주목한 게 아니고, 이견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하나 한 이야기였는데, 문희상 의원이 갔다 와서 마치 그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은, 일본 측의 어떤 융통성 있는 태도를 자기가 봤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 // 이원덕

일본이 양보 가능성을. 음...

#### // 이면우

재협상의 가능성을 조금은 그래도...

# 韓日關係 向方

## // 박훈

강경화 후보가 나오고, 뭐 UN의 고문위원회 나오고 이러면서 기대가 컸던 건데,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 하신대로 정부의 주요 담당자 중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반대로 또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가 발전하면서 여론을 탐색하는 건지, 아니면 대일 라인을 안 갖춘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더 이런 쪽으로 가면 마치 불가역적인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금방 협상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여론을 조성해 버리면 되돌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 // 김웅희

저도 지금 박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분위기는 국민의 기대는 재협상을 하면 굉장히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처럼



김웅희\_인하대학교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 정부 들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일 외교라인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국민정서와 현 정부의 대응 사이의 간극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희상 특사가 가기 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3의 길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게 본인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대통령과의 일정한 공감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감 하에서 그 말이 나왔고 제3의 길이라는 것이 내용이 있다면, 현 정부와 매스컴에서 이루어지는 보도 사이의 괴리라는 것도 뭔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훈

뭘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제3의 길이라는 게.

// 김응희

그게 저는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 박훈

틀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원덕

저의 해석으로는 제가 약간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하는 쪽인데, 문재인 캠프의 대일 외교에 관여하는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까만 생각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희상 특사가 말하는 제3의 길이라는 것도 국민 여론이 주장하는 것은 파기나

# 韓日關係 向方

재협상이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합의 이행의 중간적 선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과 같은 양상이죠. 양자택일로 보지 말고 중간적인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고, 중간적인 선택은 단적으로 말하면, 합의의 개선, 보완이에요. 위안부 합의는 보충 협상을 통해서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우선 국민들을 위해 합의에 대한 올바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위안부 합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검증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협상 과정 및 내용에 대한 해석과 협상 이행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합의에 대해 편견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국내적으로 처리하거나 그와 더불어서 국내 합의의 기반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일 외교 차원에서는 핫 채널을 가동하여 합의를 해놓고, 일본이 그 이행과 실천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 예컨대 감성적인 조치에 대해서 아베가 탄 소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죄 편지를 쓸 생각이 털끝도 없다는 발언은 사실상 합의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향후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하여 요구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컨대 추모비, 위령비 같은 것을 만들어 고노담화의 핵심 내용과 합의문의 본질 부분 내용을 새겨 넣는다든지, 위령비에 와서 일본 정부 대표가 참회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합의의 파기, 재협상이라기보다는 합의의 철저한 이행 또는 합의의 완수라는 개념으로 재해석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마 저는 문희상 씨의 머릿속에 있는 제3의 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 김응희

일종의 보완적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네요.

// 이원덕

그렇죠. 보충 협상이죠. 큰 틀은 유지하되.

// 박훈

그런데 문안에 대한 보완은 아니지 않나요? 문안은 그냥 놔두고, 사후 조치를, 감정에 어필할 수 있는 조치를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하자 이거 아니에요?

// 김기석

그런데 이제 불가역성 문제는 사실 일본도 미국이 다자합의인 TPP를 파기하는 데도 아무 말 못했기 때문에 너무 제약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박훈

외교모드에서 그렇게 하고도 또 손 본 경우가 있어요?

// 김기석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례가 많아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일본이 우리보다 강대국이라는 거지요. 강대국들은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일본도 미국이 TPP 파기했는데도 아무 말 안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3의 길 같은 타이틀로 절충적 방안을 찾는 것은 사실 외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첫 번

째 시금석이 뭐냐면 소녀상 문제일 것 같아요.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양국 정부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조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상징화 돼가지고 그것이 양국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져 버렸거든요. 이거 예컨대 춘천에서는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소녀상 건립하자고요. 물론 거기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컨대 다른 장소에 무언가 건립을 하는 등의 형태를 취하면서 기존 설치 장소를 조금 옮긴다든가 하는 절충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 // 이원덕

저는 소녀상 문제는 명확한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시간 축의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즉시 하라고 하면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전 일본이 기대하는 내용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공관 앞에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과 일반적인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도 외교 공관 앞에 상징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게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외교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민단체에서 위안부합의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 설치한 것을 당장 어떻게 하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해법적 측면에서 소녀상은 적당한 곳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원칙만 밝힌다면, 일본이 그렇게 당장 이전하라고 보채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간 축을 어떻게 놓고 보냐면 합의가 이행

되는 과정 즉, 생존자, 사망자 가족에게 금전 지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 상징 사업으로서 위안부 위령비의 설치가 이뤄진다면 그것이 소녀상 이전을 피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즉, 위령비나 위안부 역사기념관의 설치를 하나의 계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위령비가 세워지고 역사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 시민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소녀상은 거기로 옮겨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는 것을 한국정부가, 원칙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청사진으로 보여준다면, 일본 정부가 지금 처럼 그렇게 반발할 거라고 생각이 안돼요.

### // 김웅희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가 국내적인 합의를 좀 얻어야 될 텐데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김기석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실현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한국은 그 소녀상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다른 장소에 옮겨요. 옮겨서 그곳을 추모장소로 만들고 비슷한 시설을 일본에도 하나 만들어요. 일본정부도 협조해서. 그것은 공원 같은 상징적 장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양쪽에 말하자면, 정서가 닿는 공간을 동시에 설치하는 정도로 해서 서로 양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들에게도 어필해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지만요.

### // 이원덕

현실적으로 아베 정부 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베가

아닌 보통의 일본정부라면 충분히 우리가 협상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 // 이면우

특히 현재의 일본에서는.

## // 이원덕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서 그게 문제지.

## // 김기석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소녀상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평행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 // 이면우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우리끼리, 학자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런 회의에서 그야말로 위안부 문제든 내지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 내지는 할머니들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같이 한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타당한 것 같아요. 어제 그 모임에도 예를 들어서 좀 더 비판적인, 위안부 문제나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언뜻 들어보면,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그러니까 파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결단은 정부가 하는 거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파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비판적인 분들의 경우, 정권이 바뀐다는 차원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

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 여지가 진짜 시민단체 내지 그 할머니들한테도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적인 분들의 얘기 중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 것은 아마도 성의다,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부 또는 정부 측에서 그걸 담당해서,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와 그 지지단체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소통에 성의를 담아서 이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한다고 정중히 응대하는, 이런 식의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타당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방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 박훈

저는 흥미롭게 느꼈던 게 파기나 재협상이 아니라 제3의 길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생각했던 거 보다 비판 여론이 없다, 반발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솔루션은 있는데 한일 외교라인에서 어필할, 리더들끼리 합의할 수 있는 솔루션이 사실은 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론 설득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론 설득을 하려면, 상징 투쟁을 해야 되는 건데, 솔루션도 솔루션이지만 여론 설득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이원덕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체질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내용이 너무 형편없어서 이렇게 몰린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소통 부족에서 생긴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정치의 제1의 모토를 소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면 국내든 대일 외교든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 박훈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이 시간 축 얘기하셨지만, 1년 내에 서둘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막 7, 80프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얼른 대일 라인을 정비해서 그 시그널이라든가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여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건 아닌지요.

## // 이원덕

합의의 패키지를 새로 만들고, 그걸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1년 내에 이루어지면 된다고 봐요. 소녀상의 이전은 10년 뒤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그렇게 까다롭게 굴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정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장기적이라도 이전한다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준다면, 자기들도 일본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런 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소녀상 이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일본 측도 일본 국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 // 김기석

그러니까 대안을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걸 외교적 테크닉이나 전략의 문제 성격이 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이 문제를 부각했던 것과 반대 전략으로 가는 거죠. 정치학에서 말하는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전략인데, 이 문제는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다른 이슈들, 특히 협력과 관련된 다른 이슈들을 부각시키면서



김기석\_강원대학교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이슈들을 여러 개 만들어 추진하면, 이 이슈가 갖는 현저성(salience)을 줄이면서 시간을 벌게 되고, 차차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도, 우리 국민들한테 자존심의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큰 저항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전략을 공개적으로 국민과 언론에 말하기 쉽지 않은 문제는 있지만, 전략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 전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가 지난 4년간의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일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거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韓日關係 向方

## // 박훈

근데 이런 얘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7~80%의 지지를 얻고, 어쨌든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씨 개인의 대일자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 이면우

근데 김 박사님이 얘기하고, 아까 이 박사님도 얘기한 투 트랙 문제 인데요. 과연 그게 진짜 될까. 위안부 문제 내지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능한지. 저도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를 장기적으로 놓는 투 트랙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안부 문제 내지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진짜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 // 박훈

안 되는 이유는 국민 여론 때문에 그런가요? 국민 여론을 설득을 해야죠.

## // 이면우

그렇죠. 하지만 국민은 여론을 배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과연 투 트랙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장기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하겠지만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지요.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 // 김기석

저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본과 다른 협력

이슈가 생겼다는 게 제가 볼 때 우리 국민에게 낯선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우린 그렇게 많이 해왔었고. 지난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상할 정도로 위안부 문제를 너무 강조해 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협력 이슈, 즉 일본하고 이런 협력사업을 하게 됐다, 이런 회의를 하게 됐다는 등의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논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정상화하면 어떤가 생각하는 거죠.

## 정치 안보의 현안을 극복하려면...

### // 김기석

자, 너무 길어졌으니 정치 안보로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드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핵 문제를 놓고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얘기했던 트럼프 정부와의 한일 각각의 관계 설정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될 것인가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전작권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듯한 인상인데... 이 문제를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보면, 과연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어야 되는 건지. 예컨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관계 안보협력관계 속에서 과연 한일관계가 어떤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말이죠. 이런 걸 좀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면우 박사님.

## // 이면우

저는 안보 자체보다 신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DJ 정부 때 한일관계가 일본이 그렇게 바짝 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풀렸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저는 북한 요인이었다고 생각 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내지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효용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적지 않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현 정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는 꽤 신중하고 점잖게 대일정책을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주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우호적 자세가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한일관계를 대북 정책이라고 할까 내지는 현 정부가 생각하는 안보정책 또는 외교안보 정책의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는 측면에서 나쁘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 이원덕

이면우 박사님은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같고요. 저는 역사 전선도 걱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안보 전선도 앞으로는 한일 간의 잠재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한일 안보협력력이 한미동맹의 혹은 한미일 협력의 숨은 코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일정한 대북공조 또는 안보협력은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외로 우리의 많은 국민들은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같은 건 파기해도 된다, 일본하고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협력은 해

선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현실은 한일 양자관계가 아니라 한미일로 엮여 있고, 대북 공조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시하고 건드리게 되는 경우에는 한미동맹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GSOMIA 문제는 가볍게 한일관계 차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파기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균열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위안부 문제와는 달라요. 1년 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작년에 워낙 줄속으로 GSOMIA를 체결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효화시키면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안보전략의 근간과 연관된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의 대화 협력을 추진하면서 GSOMIA를 파기하는 선택을 하면, 미국이나 한미동맹에 주는 시그널은 대단히 네거티브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 김기석

게다가 GSOMIA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더 커지는 측면이 있죠. 과거에는 HUMINT(첩보활동) 때문에 한국의 국민들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상당히 정교한 정보수집이 가능했는데, 관계가 나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여서 미국이나 일본이 제공해 주는 위성정보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군사적 측면에서도 물론 그렇고... 그렇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역설적 상황이 됐죠. 근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과거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재구축한다든가 하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 韓日關係 向方

GSOMIA 문제는 생각보다 국민들에게 어필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크게 정치적 이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 // 이원덕

의외로 대일 외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 // 김기석

네,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중후가 나타나면 한국이 긴장하곤 했었거든요 그 동안은. 근데 지금 아베정부 하에서는 그런 기조나 방향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죠.

## // 이원덕

북일 관계의 진척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 김기석

거의 없죠.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오히려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대북관계 개선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아닌데 일본과의 관계라던가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사업이라든가. 한국에는 대미외교 중심 노선과 대북 관계 중심 노선, 이 두 가지가 병존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얘기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 이면우

최근 인터뷰에서 보면 문정인 씨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제시했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노선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대한 처리 아니겠어요? 제가 미국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미국을 거의 가시화한 측면이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북한의 위협을 조금 더 가시화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위기감이 확산된 것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도 나온 것처럼 CIA같은 데도 지금 특별반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에서의 북한 위협에 대한 심각성은 꽤 커서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마 현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북한과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 등에 대한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할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겠다는 식의 순서가 되어야지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 // 김기석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이후 연구자들이 의외로 받아들였던 게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있던 북핵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한 것이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본 측의 생각은 어떤가요? 일본 측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 // 이원덕

제가 파악하기에 일본에서 오바마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

## 韓日關係 向方

에 대한 실망은 컸습니다. 일본은 한국 못지않게 북한의 핵, 미사일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위협을 훨씬 더 리얼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미국이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대외정책의 긴급 아젠다로, 물론 그것도 레토릭적인 의미가 크겠지만, 외교안보의 핵심테마로 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순수하게 외교적 차원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압박과 대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모순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맥시멈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의 길은 열어 놓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대북 외교이고 중국도 기본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는 제재와 대화거든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다만 지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정인 특보가 밝힌 것처럼 지금 개성공단을 열 것이냐 또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냐, 당장 5·24 조치를 해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까 논의한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책 기조에 대해선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해야 할 국면에 갑자기 대화를 하자고 나올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대북 정책의 큰 기조나 철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외교 기술적으로 타이밍과 상황과 조건,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상호 조율해 나가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6월 말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정상 간의 신뢰가 형성돼야만 타이밍 조절이나 상황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는 특사 외교든 정상 외교든 통해서 주변 특히 미·중·일·러

주변 4강과의 신뢰관계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석**

제가 그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대북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조절이라든가, 대북관계를 매개로 해서 대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떤 모멘텀 같은 것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얘기해보자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일본과 협력해서 대북관계와 관련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여지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이원덕**

제가 보기엔 평양을 통해서 도쿄로 가는 방향의 순환 고리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도쿄를 통해서 평양으로 가는 방향성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기석**

그렇죠.

**// 이원덕**

한일이 공조해서 북한 다루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일관계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 대화노선으로 가게 되면 일본의 경제의식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북핵을 한국이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한국은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일본 국내에서의 불신과 불안은 굉장히 깊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핫 채널을 통해서 긴밀한 대화를 진행시키면서 대북관계

를 진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일 경제 관계의 구축 방향에 대해

### // 김기석

시간이 많이 갔으니 이제 경제얘기를 좀 하죠. 전체적으로 지난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 경제, 한국과 일본 경제 관계의 성격이 굉장히 변화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고, 그 방향성은 대개 경제거래의 규모가 줄어들고 상대방 국가가 서로에게 갖는 경제적 중요성이 축소되는 방향이었거든요. 또 더 많은 영역에서 한일 간의 일종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요. 이게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증시가 살아나고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도 훈풍이 분다는 등 희망적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일 경제 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웅희 교수께서...

### // 김웅희

현 상황이 한일 경제 관계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동아시아 레벨이랄지 좀 더 큰 틀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정도는 처음 한일 FTA가 논의가 이루어졌던 십 수 년 전에 비해 지금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 산업 협력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한일 경제의 협력과 강도와 분야 같은 것들을 증가시켜야 하는 건 맞는데, 예전같이 양자 간 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협력이라는 틀 내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김기석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사실 경제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것 중 하나가 사드 때문에 중국이 보복하는 걸 보면서, 일본하고 동남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동남아로 가는 기업들은 있지만, 또 일본과 교육이라든가 투자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과거 같이 중국 러시는 없을 것이고, 그 대안으로 결국 우리가 다시 일본을 주목해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김응희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업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경제계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시장은 없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지고 중국을 대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각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잖아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돌아가서, 일본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가져가자는 논의는 충분히 성립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일본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일 경제관계의 복원까지는 아니지만 체질 개선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韓日關係 向方

// 박훈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한일 간의 경제 현안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경제 트리블?

// 이원덕

한일 FTA의 문제인데요.

// 박훈

그걸 트리블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웅희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한일 FTA도 한일 양국 간의 논의로 진행될 가능성 보다는 좁게는 한중일 FTA, 넓게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같은 틀 내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훈

질문 하나하고 싶은데, 일본이 주도하는 TPP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그 일대일로나 AIB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약간 어정쩡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련시켜야 하나요?

// 김기석

굉장히 큰 주제인데 아무튼 다자협력 이슈를 우리가 볼 거니까 섞어서 얘기하죠.

## // 이원덕

저는 한일 경제 현안만 놓고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 하나가 한일 FTA입니다. 한일 FTA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TPP 탈퇴로 무역통상에서 다자구도가 상당히 약화되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TPP 구도에 신규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상황이 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산업계 특히 대기업 위주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과의 FTA는 상당히 우리에게 경제적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TPP도 흔들리고 있고 여러 다자무역 기구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죠. 세계 4대 시장에 지금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는 건 일본밖에 없거든요. 미국 유럽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하고는 물론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기는 했지만 한중FTA도 맺었죠. 이제 남은 과제는 일본인데 여러 국제·경제적 상황 전개를 볼 때 한일 FTA 논의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한일 간의 청년 일자리 협력 문제입니다. 최근에 저는 대학에 있어서 그런지 대졸자들의 취업 문제를 늘 고민하게 되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한일이 윈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협력아이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일본은 엄청난 구인난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크거든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어가 어느 정도 구사 가능한 인력의 경우에는 일본 현지 취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간에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와 일본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부 간 협력 매커니즘을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한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의 인력이동이 가능한 안전판을 만든다면 한일이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아이টে이아말로 한일의 새로운 상생협력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응희

인력이동 문제 같은 것들을 FTA 틀 내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FTA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죠.

// 이원덕

말하자면 한일 일자리 FTA라고나 할까요...

// 김기석

뭐 그런 얘기도 많죠.

// 박훈

문재인 정부도 그런 쪽에 좀 친화적인가요? 한일 FTA에 어느 정도 이해를 보이고 있나요?

// 김응희

아직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덕

너무 추상론이고요. 일자리 FTA,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 협력을 한 일 간에 하자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국정 아젠다이기 때문에 바로라도 먹힐 수 있는 주제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위안부 문제 같은 이슈는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훨씬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 김기석

아까 한일관계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서 대응하면 어떨까 하여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학자들이 TPP와 RCEP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둘이 서로 보완적 관계이다, 또 하나는 둘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다 입니다. 근데 지금 나타난 건 경쟁적 관계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빠지면서 TPP가 시들해지니까 RCEP도 흥미가 좀 반감되는... 이게 좋은 찬스니까 빨리 하자고 말은 하는데 협상이 늘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지역 협력의 문제들이 힘을 잃게 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박훈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AIB나 일대일로 같은 사업들이 동아시아라는 지역 틀에서 시도되었던 RCEP과 달리 새로운 단위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를 단위로 한 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말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흥미를 잃은 것이냐, 더 큰 꿈을 꾸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 이면우

중국이?

## // 김기석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동아시아 협력과 관련한 기구들에서 일본도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 협력 단위에 대한 일본의 관심도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도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루틴한 모임은 계속하지만 확실히 동력이 좀 약화되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TPP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TPP와 관련한 일본의 전략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는데... 사실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자 일본의 생각은 선거 이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실현되고 난 다음에는 당혹감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투 트랙 전략 같은 것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소위 양자 FTA의 틀을 받아들여서 협상을 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는 약속했었죠. 그러면서도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일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끝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주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TPP인데, 뭐냐 하면 TPP-1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다른 지역과의 FTA협력을 강화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 무슨 일이 나면 그 이후 포스트 트럼프 때 TPP를 다시 완성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이면우

근데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전 국제정치·경제 전공이 아니어서, 미국이 빠진 게 우리가 TPP에 조인하는 데 유리해진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이 있을 때는 허들이 높아서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 // 김기석

간단히 대답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FTA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TPP 가입에 부정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TPP 회원국들이 대부분 우리가 양자 FTA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예요. 특히 TPP는 미국이 중심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한미 FT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했던 협정이에요. 그래서 RCEP과 TPP의 가장 큰 차이는 TPP는 관세를 거의 다 없애겠다는 생각이었고, RCEP은 80%정도만 관세를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TPP 안에 페루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들어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그런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할 수 없게 됐어요. 게다가 TPP에서 소위 템플릿으로 사용했던 협정이 한미 FTA였습니다. 그 정도로 한미 FTA가 수준 높은 거였거든요. 미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양자 FT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TPP에 가입한다면 한일 간 협상이 가장 관심사라고 봐야하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은 상황이죠.

## 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김기석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정리 겸 해서 정상 외교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외교가에서는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은 미국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6월 달 정상회담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죠.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출국한 것을 계기로 일본을 들러 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경우 재미있는 것은 가는 길에 들를 것이냐, 오는 길에 들를 것이냐 이죠. 또 검사검사해서 중국도 들를지 어떨지. 결과적으로는 한국 외교의 방향성 같은 걸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길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 // 이원덕

이른바 제팬 스쿨에서 나오는 논의하고 외교 일반을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논의가 좀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외교전문가들이 보는 로드 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첫 대면하게 되는 건 함부르크에서 7월에 열릴 G20회의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 전에 열린다면 먼저 도쿄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수는 있겠지요. ASEAN+3,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APEC 이런 것들이 가을부터 쪽 있기 때문에 다자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계기는 네, 다섯 차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자회담에서의 대면으로는 폭넓은 협상은 어려울 것이고요.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여러 한일 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그 이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공동선언문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다양한 다자회담에서의 양자대면을 여러 번 가짐으로 해서 신뢰를 축적한 다음에 내년 쯤, 2018년은 마침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라는 계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2018년 쯤 국민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로드 맵을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막연하지만 한일관계 정상화의 로드 맵을 그리자면 그런 식이 좋지 않을까요.

## // 김기석

서틀외교 제안도 있었죠. 서틀외교를 우리가 제안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일본이 부정적이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에 맞는 무엇인가 실행하고자 하는 행동이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 // 이원덕

지금 말씀드린 건 외교전문가들이 그려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관계를 먼저 강화한 후 다음에 한일관계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방금 언급하신 것은 말하자면 역발상과 같은 건데 한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쿄를 통해서 워싱턴을 가는 방법도 없지 않다는 그런 발상이겠지요. 저는 그 방법이야말로 상당히 신선하고 나름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한·미·일의 협력 틀을 강화하는 전체적인 전략적인 사고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 // 이면우

그러니까 단독이면 문제는 거기에 걸맞은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지요. 시일도 촉박하니, 그럴 경우 아주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내년 ‘한일파트너십 선언 20주년’ 등을 활용하고, 단기적으로는, ‘셔틀외교’ 복원의 얘기도 운을 띄웠으니, 일반적 예측처럼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 박훈

동경을 먼저 들르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방문지로 일본을 택한 적이 있나요?

# 韓日關係 向方

// 이원덕

워싱턴 가는 길에 들른 거죠.

// 박훈

그래도.

// 이면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건 대통령 되기 전인가?

// 박훈

굉장히 드문 일이니까 의미가 좀 더 크고.

// 이원덕

역발상이고.

// 박훈

국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지렛대로 해서...

// 이원덕

만약에 그런 발상으로 방일을 한다면, 일본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양보할 후 있는 폭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 박훈

선물을 주는 거죠.



// 김기석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의외로 미국을 포함한 순방 일정상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는 걸로 큰 이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의 프레임 때문에 다들 너무 두려워하는데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베도 1차 내각 때 한국부터 먼저 온 사실도 있고...

// 이원덕

신선한 발상이라고 봐요.

// 김기석

예를 들면 순수하게 일본만 방문하기 위해서 간다면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순방이라고 이름 붙여서 일본 먼저 가는 것이죠. 미국 입장

# 韓日關係 向方

에서도 일본과 관계가 좋아진 한국 대통령이 오는 것은 선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뻐던 한일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들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죠. 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

## // 이원덕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한 레종 데트르가 분명해야 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인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한 일자리 FTA를 전격적으로 한다든지, 큰 틀의 일본과 한반도 경제협력 또는 평화구상 같은 걸 내놓는다고 뭐 그런 좀 플러스 적인 게 있어야지 위안부와 같은 마이너스적인 아젠다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요.

## // 김기석

그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뭐 생각해 낼 수 있는 것 많잖아요. 협력 이슈들, 근데 다 죽어버렸죠. 올림픽도 있을 수 있고 노령화 사회 협력도 있고 재정 관련된 부분도 있고…

## // 이원덕

굽지굽지한 것을, 이를테면 경제 산업, 안전 평화 아이템과 더불어서 역사 문제를 다룬다면…

## // 김기석

네. 역사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합의하면 불가역 이런 걸 좀 피할 수도 있고. 외교적인 테크닉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박훈

문재인 정부는 한국 내 재팬스쿨의 어드바이스에 귀를 좀 여는 편인가요?

// 김기석

아직은 몰라요.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할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

// 이면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시는군요. 아직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이원덕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한국의 4강 외교 속에 대일 외교를 위치시키잖아요? 전략적인 발상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한미관계 또는 한중관계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공간은 매우 적어요. 그에 비하면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 및 역할은 상대적으로는 매우 큼니다. 상대적으로 한일은 대등한 관계이기도 하고 한일관계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리더십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략적 사고로 만약 도교를 통해서 워싱턴을 간다, 도교를 통해서 베이징을 간다, 도교를 경유하여 평양을 간다는 전략적인 발상을 한다면, 우리의 전략 공간은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4강 외교 중 가장 넓게 열려있는 공간은 대일 외교라고 봐요.

한미관계는 어차피 비대칭 관계이고요. 또 미국이 동아시아를 보는 눈은 중국과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을 보는 것이고, 또 중국도 외교적 중요성으로 보면 한국은 낮은 등급으로 보고 있지요. 일본은 그렇지 않죠.

# 韓日關係 向方

서울·동경 축을 외교적인 전략 차원에서 잘 활용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큰 발상이 가능해요.

// 김기석

그런데 이제 재팬스쿨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일본을 중시해서 그렇다고 오해를...

// 이원덕

그게 문제예요.

// 김기석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인데...

// 이원덕

제가 여러 소식통을 종합해서 추측해 보는데, 일본 외무성이나 총리 관저에서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소위 레드라인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에 관해 한국이 파기를 선언한다면 일본으로서도 힘들다, 굳이 비유하자면 미국이 ICBM 발사를 대북 정책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자고 나오면 정말 대책이 없는데, 합의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재협의라든지 재정의 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일단은 대화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제인 정부의 문제 제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관측이 됩니다.

// 박훈

뭘, 그런 면에서는 아베랑 전화한 것이나, 문희상 특사가 와서 발언을 한 게 사전 포석을 잘 깐 것 같은데요.

// 김기석

조금씩 조금씩 톤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잖아요. 다음 번 메시지가 기대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훈

워낙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다루기에 따라서는 의외로 생각했던 것 보다는 부드럽게 풀릴 가능성이...

// 김기석

네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일본, 대일 관계의 틀, 프레임 자체가 좀 이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한일관계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봅니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독도문제 얘기 안 했는데 뭔가 또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日本空團**